

일하는 국회 합의... 원 구성은 이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다음달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 열기로 법사위·예결위 놓고 힘겨루기... 내일 청와대 회동서 합의 주목

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를 개원하고 오는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원 구성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툼의 씨앗은 남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 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4-15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진다.

특히 여야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에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여야 원내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가 입장차를 줄여가면서 개원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개선안 등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사령탑은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받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긴 침묵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 입장 안 내... 검찰 동향 관측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윤 당선인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비리' 의혹마저 불거진 만큼 당내에서도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여론과 검찰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남인순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행동을 촉구한 것은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당의 신중 기조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경찰위 의뢰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상식적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내서는 그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이전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당과 국회의 공식 행사에도 불참하며 언론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정연 회계자료를 확보한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윤 당선인이 입장 표명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제청 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의 한 핵심 인사는 "검찰이 살펴봐야 할 자료가 산더미라고 한다. 개원 전에 영장을 질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간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의원직이란 방탄막을 치고 사법당국에 맞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통합당·한국당 합당 결의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 후 결의문 발표

미래한국당은 26일 모(母) 정당적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기형적인 위성정당 체제가 완전히 소멸됐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 후 발표된 결의문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15 총선때 국민들께서는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넓은 관습과 관

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우려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약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당초 합당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인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당대회 대신 합동회의로 대체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다음달 개원 맞춰 3차 추경안 제출"

김태년 원내대표, 野 협력 요구 여야정 상설 협의체 제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며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빛을 내더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 당장의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내년 본예산도 '신속·과감, 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이다. 재정으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전시상황"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필수 상임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개원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소통과 협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추경의 효과는 예산 집행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런 늦어도 6월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탁헌민 靑 의전비서관 내정



탁헌민 대통령 행사 기획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사직했다.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한단계 승진해 청와대에 복귀하는 것이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 각종 대통령 행사를 기획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당은 26일 의원단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광주출신 3선 권은희 의원을 선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에서 재선을 한 뒤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절



인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